

공정위, SK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 8700억 기술·금융 지원

SK 7개 계열사 상생협약 참여
1·2차 협력사 대금 조건 개선
SKT, 2일 내 전액 현금 지급
소부장 실증시설 무상 제공
4300여 개 협력사 수혜 전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SK텔레콤타워에서 열린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SK와 1·2차 협력사들 간 상생협력 혜택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흘러들어갈 전망이다. 대금 지급 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총 87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SK텔레콤 타워 4층 SUPEX홀에서 SK 그룹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SK실트론, SK AX, SK인텔릭스 등 7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달 29일 삼성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두 번째다.

◆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인센티브 유인책 마련

이번 상생협약의 핵심은 SK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대금 지급 조건이 중소기업의 유동성 및 안정적 기업 운영과 직결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SK는 1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현금성 결제 원칙 준수와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을 유지·확대한다. 특히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마감 후 2일 이내에 대금을 100% 현금으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1·2차 협력사 역시 하위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생결제방식 도입 확대하기로 했다. SK는 대금 조건 개선에 성실히 동참하는 협력사에게 '협력사 등록·갱신 시 기점 부여', '동반성장펀드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 SK하이닉스 중심 8700억 투자... 실증 검증용 시설 구축, 무상 제공

첨단 기술력이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금융 지원책도 신설·확대된다.

SK하이닉스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 약 8700억 원을 투자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사의 양산 검증기간 단축과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실증 검증용 시설인 'Trinity Fab'을 구축하고, 이를 소부장 협력사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협력사와 공동 R&D 추진 시 실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해 과감한 연구개발을 돕는다. 나아가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4300여 개 협력사 수혜 예상... 공정위 "상생협력 문화 지속 유도"

이번 협약으로 SK 거래망에 속한 약 4300여 개의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이번 상생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SK와 1·2차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은 SK의 성과가 중소기업들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해 기업 간 상생의 선순환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1·2차 협력사 역시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상생의 성과가 협력사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반칙하는 기업에는 선진국 표준에 맞는 엄정한 규율이 뒤따르겠지만, 혁신에 집중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OECD "부동산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2026 보고서서 세계개편 제인
주거이동성 높여 시장마찰 완화
법인세 단일세율 전환 권고



프랑스 파리 소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 /OECD 홈페이지 갈무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OECD는 거래세 비중이 줄면 국내 주거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보유세 비중이 늘면 조세 누진체계 등 공정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봤다.

OECD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산 세제에 대해, 부동산 세수가 OECD 대비 높은 편이지만 거래세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반해, 왜곡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보유세 비중은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9.4%로, OECD 평균인 56.0%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어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이 주거이동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시장 마찰을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또 "실거주가 아닌 주택에 대해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 누진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전체 세수의 15.5%에 달하는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4단계 누진구조로, OECD 여타 회원국과 비교해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회원국 38곳 가운데 3단계 이상의 누진구조를 가진 나라는 한국 등 4개국뿐이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며, 조세지출 준비를 통해 비과세 근로자를 축소하고 과세 기반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해 균일 과세를 지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국내 기업승계제도가 상속세 회피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와 달리, 상속세를 수혜자가 아닌 상속 자산에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속세 제도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상황 관련해서는 12·3계업과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및 반도체 호황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25년 계업으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확장재정 등으로 회복됐다"며 "특히 소비쿠폰은 소비·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며 "2026년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중 중동 전쟁이 발발했으나, 신속한 위기 대응 조치로 부정적 영향 축소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고 인센티브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발전 5사, 석탄발전 폐지 지역 충격 줄인다

남부발전 주관, 활용 용역 착수
지역경제·고용 안정 방안 마련

남 달 30일 서울 발전회사협력본부에서 석탄발전 인프라의 효율적 재활용과 유류 인력의 안정적인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석탄발전 인프라 및 인력 활용 방안 마련 용역'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남부발전이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발전 5사가 함께 참여한다. 용역 수행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총 12개월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내 발전 공기업들이 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남부발전은 비롯한 발전 5사는 지

발전사들은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발전소 폐지 지역의 여건과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국내외 석탄발전 폐지 사례 및 지자체별 요구사항 분석 ▲지역 맞춤형 에너지전환 모델 발굴 ▲모델별 경제성, 생산유발·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영향 검증 ▲발전소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방안 수립 및 전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본소득, 농촌 되살리는 해법 되도록 보완"

송미령 장관, 정선 고한리 현장 점검
인구 1847명·가맹점 167곳 증가

류점·베이커리 등 112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및 농촌마을 재생'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기본소득 등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되살리는 해법으로 자리 잡도록, 현장을 계속 살피고 정책의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성과 등을 점검했다. 또 마을 환경과 빈집·노후주택 등의 정비를 통해 마을이 재생·활성화된 사례를 둘러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정선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인구(+1847명, 5.6%)와 가맹점 등록(+167개소, 8.7%)이 늘었다. 또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신규 창업(업종변경 포함)도 이어져 약국·마용실의

특히 ▲귀촌한 약사의 약국 개업, 폐업된 가게 인수 후 차진집 창업 ▲8년 전 폐업한 노래연습장 재창업 등과 같이 한동 안 면 단위 지역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창업 사례가 생겨났다. 북평면의 경우, 면 지역 창업지원 사업 1호점이 문을 여는 등 면 단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정선읍의 한 빵집은 소외계층·복지시설 대상 후원을 확대하는 등의 미담 사례도 전해졌다. 간담회가 열린 마을호텔 18번가의 경우, 빈집·노후주택·상점 등이 많은 마을 골목을 주민 주도로 환경 개선을 시작하고, 이후 행정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빈집 등을 리모델링했다. 이후 음식점·카페 등 다양한 상점과 연계해 마을호텔 18번가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킨 곳이다. 많은 관광객과 마을·단체에서 견학을 위해 찾는 농촌 재생의 우수사례가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진공, 선사 지원 중견까지 확대

2차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안 발표

2차 지원안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지원안의 핵심은 더 넓게, 더 가볍게라고 공사는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선사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지원 범위를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중견선사까지 확대하고 부채비율 등의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진공은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2026년 중소기업 CEO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경영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해 온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책이다. 앞서 제1차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총 3887억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중소기업으로 제한됐던 지원 범위를 신규 중견선사까지 넓혔다. 또 중견기업 진입 이후에도 3년간 지원 자격을 인정하는 '성장사다리' 제도를 마련해 성장 단계에 있는 선사들을 폭넓게 아우른다.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했다. 부채비율 기준을 기존 500%에서 600%로 조정해 더 많은 선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자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